

미중전략경쟁시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 지정학과 게임이론중심으로

고 은 귀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I. 서론	IV.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분석
II. 이론 검토	V. 결론 : 함의 및 제언
III.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하여,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을 지정학에 기반하여 분석하였고, 악화된 한일 관계 정리를 위한 정책적 선택을 게임이론(중위투표자정리 및 기대효용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여 전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학적으로는,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아시아제국’, 중일 전쟁 시의 ‘동아신질서(동아협동체론)’, 제2차 세계대전 시의 ‘대동아공영권’, 60년대~90년대까지의 ‘한태평양연대구상’, 그리고 아베 총리 이후의 ‘인도태평양전략’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일본 특유의 지정학적 아시아 지배전략을 구상하고 끊임없이 침략과 도전을 반복하였다. 현재는 중국 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돌아와, 미국과 함께 규범기반의 가치(rule-based value)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을 규합하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 한반도는 대륙진출의 발판이자 과거 소련의 남하를 방어할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일본 이익선일 뿐이고 지금도 그들의 인태전략에는 한국이 없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일본은 북한과는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가장 핵심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두 문제를 분리하여 비핵화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 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인 납북문제가 일본의 가장 큰 현안이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최소한 현상유지와 같은 소극적 정책을 지지하였으나 최근 일본 내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일본 국익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향방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의 북핵문제 해결 테이블에서 역외의 참관국일 뿐이므로 한국은 한국 나름의 재팬 패싱(Japan Passing)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한국 정책관련해서는 위안부와 징용공문제가 악화일로의 원인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개인청구권 문제가 양국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모호성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서 관련하여 양국 관계의 핵심 어젠다(agenda)가 되었다. 징용 판결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양국의 정책 선택 기대를 게임이론으로 분석하여 기대예측 정책 선호안을 도출한 결과, 한일 전문가들이 그 동안 수없이 많이 제안하여온 ‘현금화를 유보하고 다른 타협안을 모색할 때 까지 양국이 협조한다’로 나왔다. 이 정책안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나, 국제 정세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한일관계, 북일관계, 지정학, 게임이론

I. 서론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계승하였다. 윤석열대통령은 당선 후 일본에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보내 한일관계개선 의사를 피력하며 대일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일본 기시다총리는 양국의 우호적 발전을 기대한다면서도 ‘국가 간 약속 준수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¹⁾ 즉 위안부합의 파기 문제와 2018년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판결이 1965년 한일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제기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위안부문제, 징용공문제와 같은 과거사가 먼저 선결되어야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최근 아시아투어로 양국을 방문한 미국 바이든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중재하면서 한미일 삼국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이미 2022년 2월 11일에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서’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에 북핵 문제 대응으로 ‘한미일 삼각채널 협력 확대’를 명시해놓으며 한국과 일본에게 노골적으로 동맹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중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한일관계는 시험대에 올라와있는 것이다. 윤석열 신정부의 대일정책의 험로(險路)가 노정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바이든대통령은 일본 방문 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우경화 분위기속에서 방위비증액 등 군사대국화로 가는데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는 주변 국가들에게 과거 20세기 초반 일본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이 지정학적 생존전략에 집착하여 만들어낸 대외전략의 결과였다.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만큼이나 오랜 지정학 연구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일본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전략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명제는 한반도 숙명, 한반도 통일에 관련하여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가이다.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전략적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우리의 대외정책이 결정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이 논문을 시작하려고 한다. 또한 대동아공영권 같은 일본의 세계전략이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정리를 위한 한일 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를 게임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지정학 및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한 후 한국의 대일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의

1) “尹정책협의단 방일...日 “국가 간 약속 준수가 기본”“, 『조선일보』, 2022년 4월 18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2/04/18/KXP5YAHBBZDWLIZA2A6NRMGBA4/>(검색일: 2022.5.30.)

구성은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지정학과 게임이론을 검토한 후, 기존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남과 북 나누어 검토하고,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그리고 한일관계 해결에 대해서는 게임이론 중 중위투표자정리와 기대효용이론으로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II. 이론 검토

1. 지정학과 일본

섬나라 일본은 허트랜드(Heartland)²⁾의 극동에 자리하고 있어서 미국이 세계전략을 실행할 때 대륙국가를 압박하며 견제하는 역할을 전통적으로 담당하였다. 섬모양이 대륙을 향하고 있으며 마치 그 모양이 초승달처럼 보이는 일본은 항상 대륙을 갈구하며 태평양을 등지고 누워있는 듯한 지형적·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그 지정학적 숙명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다. 일본은 영국과 더불어 해양국가로의 성장과 그로 인한 세계진출을 꿈꿀 수 있는 국가였지만 바다로 진출한 영국과 다르게 일본은 바다로 나가지 않고 그들의 전통적인 이익선(利益線)이라고 하는 한반도로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여 해양국가이면서 동시에 대륙국가를 꿈꾼 국가였다.

일본이 처음으로 대륙진출을 시도하였던 것이 1590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92년 군부의 불만을 대외적으로 전환하고 ‘대아시아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해외정벌로 일으켰던 임진왜란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아시아제국’ 건설계획은 일본, 중국, 한반도, 인도, 페르시아, 대만, 필리핀 등을 포함하며 특히 중국과 한반도와 그 주변 섬들을 일본의 통치에 두려고 하였다. 실상 중국정벌계획이었던 ‘대아시아제국’ 계획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결국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조선과 무역 관련에 기유조약을 맺음으로써 조선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였다.³⁾

일본에 지정학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20년대 이후였다. 일본은 미국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⁴⁾, 스파이크만(Nicholas J. Spykman)⁵⁾, 영국의 맥킨더(Halford J. Mackinder) 보다는 독일의 하우스호퍼(Karl Haus Hofer)의 지정학이론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 대외전략에 지정학적 이론 근거를 제시하기

2) 맥킨더의 허트랜드(Heartland)이론 :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는 심장지역을 지배할 것이고 심장지역을 지배하는 자는 대륙(세계섬)을 지배할 것이고 대륙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3) 김우현, 『세계정치질서』(파주: 도서출판 한울, 2001), pp.196-197.

4) 해양세력(Sea Power) 이론 :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5) 림랜드(Rimland)이론 :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간에 위치한 지역(림랜드)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시작한 것은 1938년 중일전쟁 시기였다. 일본은 지정학 학자들이 제공한 ‘동아협동체의 이론(東亞協同體の理論)’에 근거하여, 중국에 항일을 포기하고 신질서에 참가하도록 호소하는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를 선언하였다. 이 이론은 서구적 보편주의 질서에서 탈피하고 동양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질서를 일본이 중심이 되어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이 동아협동체론은 지역과 협동이라는 두 개념이 핵심인 레벤스raum(lebensraum), 즉 생활권이라는 독일 하우스호퍼의 지정학 핵심 개념을 수용한 이론이었다.⁶⁾

일본은 아시아인을 억압에서 구원하는 게 일본의 운명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른다. 1940년 7월 제2차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이 성립하면서 동아협동체의 슬로건은 대동아공영권으로 바뀌었다. 일본, 만주, 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고 동남아시아를 자원 공급지로 하고 남태평양을 군사적 방어선으로 삼으며 피점령국의 주요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려 하였다.⁷⁾ 더 나아가 진주만 공습에 대해서도 일본은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정학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일본 특유의 지정학이 역사에 본격 등장하였다. 이후 일본은 ‘팔굉일우(八紘一宇) 실현’ 즉 ‘세계 신질서의 건설’, ‘황도(皇道)’, ‘일본지정학선언’ 등과 같은 일본 중심의 신세계 창조이념을 확립하여 아시아회귀론⁸⁾을 지속적으로 제창하였다.⁹⁾ 그런데 이 세계 건설의 기초는 태평양이다. 일본은 태평양에 접하고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자국이 현대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었다. 일본의 지정학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적 수단이었던 ‘대아시아제국’ 건설이 실패한 것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경제적인 수단으로 전환하였던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군사적인 수단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려다가 실패한 것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전환하였던 것과 역사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⁰⁾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지정학자 구라마에 모리미찌(倉前盛通) 교수는 본인의 저서 『새로운 악의 논리』에서 일본의 생존전략으로 서태평양 섬나라연합을 결성하고 더 나아가 범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국가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¹¹⁾ 이렇듯 일본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배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다. 일본은 열도 통일을 이룬 때부터 ‘대아시아제국’,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정학적 아이덴티피(identity)를

6) 김동기, 『지정학의 힘』(파주: 아카넷, 2020), pp.215-217.

7) 김동기, 위의 책, pp.219-220.

8) 미국 오바마행정부의 ‘Pivot to Asia’(아시아로의 회귀)를 연상시킨다.

9) 김동기, 위의 책, pp.220-222.

10) 김우현, 앞의 책, p.199.

11) 구라마에 모리미찌 지음, 최현 옮김, 『새로운 악의 논리』, (서울: 범우사, 1980), pp.269-280.

가지며 대륙진출과 해외전략을 구사한 국가였다. 일본은 마한의 해양세력이론보다 하우스호퍼의 생활권이론에 영향을 받고 근대화 초기 정한론(征韓論)과 탈아론(脫亞論)을 대두시켜 군비증강에 힘썼고 결국 육군과 해군을 강화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세계지배전략을 구상한 것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이 세계지배전략은 현재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게임이론 : 중위투표자정리와 기대효용이론¹²⁾

외교정책결정에 있어 중위투표자정리와 기대효용이론은 매우 유용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한일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정책선택 도출을 위해 본 게임이론을 활용할 것이다. 중위투표자정리는 정치학자 다운즈(Anthony Downs)의 호텔링 모형을 적용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제도를 분석하면서 개발된 이론으로 다운스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¹³⁾

모든 투표자의 선호체계는 단봉조건(single-peaked condition)을 충족한다고 가정하자. 다수결에 의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양당제도에서 단일사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정하자. 이 선거게임에서 내쉬균형은 단 하나뿐이다. 즉, 중위투표자(median voter)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각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¹⁴⁾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교수는 던컨 블랙(D. Black)의 중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와 자신의 기대효용모델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게임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블랙의 중위투표자정리¹⁵⁾는 단순다수 투표제하에서 극단적인 정책이 아닌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결과가 승리(winning position)라고 채택된다고 본다. 메스키타는 정책 논쟁 역시 이러한 투표의 행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메스키타교수는 우선 특정 이슈에 관련 있는 행위자를 모두 규명한다.¹⁶⁾

12) 고은귀, “쿠바 미사일 위기 시 행위자 선택 게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60-62.에서 발췌 : 본 논문의 중위투표자정리와 기대효용이론 모델은 Bruce Bueno de Mesquita and Samuel S. G. Wu, “Assessing the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A model of china’s security decision mak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8, No. 3(Sep., 1994)의 모델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블랙(D. Black)의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과 뱅크스(Banks J. S.)의 단조성 이론(theorem of monotonicity)를 접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필자는 이 모델을 기본으로 더 단순화된 장영선의 “중국의 북핵 대응평가:메스키타의 게임이론 적용 및 검토”, 『춘계학술대회』, 2011년도 북한정치학회의 모델을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 장영선, “중국의 북핵 대응평가:메스키타의 게임이론 적용 및 검토”, 『춘계학술대회』, 2011년도 북한정치학회, pp.75-94.

13) 김영세, 『게임이론-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서울: ㈜박영사, 2019), p.63.

14) 중위투표자이론은 3가지 가정 즉 단일자원, 단봉적 선호, 다수결원칙이다. : 위의 책, pp.64-66.

15) 블랙의 중위투표자정리는 투표행태분석에서 유명한 이론으로서 그 전제조건은 ① 투표자의 선호안이 일직선상의 한 점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하고 ② 자신의 선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책에 투표하고 ③ 두 가지 선택 대안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16) Bruce Bueno De Mesquita 저, 김병화 옮김, 『프리딕셔너 미래를 계산하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p.275.

$N = \{ 1, 2, 3, \dots, n \}$ 을 다자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의 집합으로 표시한다. 행위자는 정부 수반과 같은 정부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정당의 관계자나 관료, 이익집단의 대표자, 영향력이 있는 일개 개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각 행위자 i 는 특정 이슈에 대해 자신만이 선호하는 해결책이 있고 이는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일직선상의 어느 한 점이 된다. 이는 곧 행위자 i 가 그 이슈에 대해 선호하는 입장(position)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무엇이 채택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의 두 가지 특성, 곧 변수를 더 알아야 한다. 하나는 그들이 가진 영향력(influence 또는 capacity)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 곧 현저성(salience)이다. c_i 를 행위자 i 의 영향력이라고 할 때, 각각의 c_i 를 전체 c_i 의 합으로 나눈 값은 각 입장을 지지하는 영향력의 비중이 되고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각 } i \text{의 영향력의 비중} = c_i \div \sum_{i=1}^n c_i \quad (1)$$

이 영향력 비중을 누적적으로 표현하면 50%의 분기점을 나타내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입장이 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라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절충안이 된다.

한편 s_i 를 행위자 i 의 현저성이라고 할 때, c_i 에 각각의 현저성을 곱하여 전체 $c_i s_i$ 의 합으로 나눈 값은 각 입장을 위해 ‘실제로’ 기꺼이 나서서 행사할 영향력의 비중이 되고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각 } i \text{의 의지가 반영된 영향력의 비중} = c_i s_i \div \sum_{i=1}^n c_i s_i \quad (2)$$

마찬가지로 이를 누적적으로 표현한 값에서 50% 분기점은 의지를 반영한 기대 정책(expected policy)이 되고, 이는 곧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1)과 (2)는 모두 행위자의 세 가지 특성으로부터 예상되는 절충안을 구하는 방법이지만 (2)가 실제 의지라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영향력이 있어도 그것을 100퍼센트 발휘할 의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행위자들은 100퍼센트의 현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의지가 반영된 영향력은 현저성 값에 의해 ‘할인’ 또는 ‘감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과 (2) 값 사이에서 최초의 절충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이 입장은 행위자들 사이의 교섭과 흥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루

어지면서 바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메스키타는 이러한 입장의 변화와 관련된 동태적인 모델도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위의 초기 예측을 해보는 시도로 국한할 것이다.

중위투표자 이론은 이슈들이 한 차원에 있고 선호가 단봉이며, 과반수로 승리하고, 투표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모두 투표한다면, 중간투표자의 위치가 승리를 가져다준다. 중간 국가의 정책 선호를 패배할 수 없다고 한다. 개별적으로 강한 국가이든 야간 국가이든 중간투표자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지지해 온 국가는 해당 정책에서 자신의 안보를 최적화 할 수 있다.

Ⅲ.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1.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 : 정한론, 아시아연대론, 탈아시아론

아시아대륙과 떨어져 있던 섬나라 일본은 섬나라 안에 있는 문명종족과 오랑캐종족의 중심과 주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인종주의 계층구조적 세계질서관을 가졌다. 이러한 일본의 인종주의 세계질서관은 19세기말 일본이 군사적 전쟁수단을 통해 해외세력을 확대시키는 정한론, 아시아연대론과 탈아시아론의 이론적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인종주의이론으로 한반도를 병합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한민족과 일본 민족은 조상이 같다는 ‘내선일체사관’을 만들었으며 1930년대에는 만주국을 위성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주족과 한민족은 조상이 같다는 ‘만선사관’도 만들었다. 이 두 사관은 주변인 한민족과 만주족은 입술로서 중심인 일본 민족(이빨)을 보호하기 위한 입술과 이빨 관계라고 인식을 근본하고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계층구조인 중화세계질서관을 받아들여 일본 특유의 인종계층질서로 바꿈과 동시에 세계의 중심을 중국이 아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관으로 바꾸었다. 일본이 중심이고 중국과 한반도는 일본의 변방이 된다는 관념으로 보면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그리고 한일병합은 변방이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개의 중심인 중국과 일본의 패권싸움이였다.¹⁷⁾

19세기에 유럽 세력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밀려들어올 때 일본은 중국의 아편전쟁을 목도하면서 중국과 같은 굴욕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1853년 미국이 개국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응하여 1854년에 개국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다. 새로운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아시아 대륙의 혼란을 이용하여

17) 김우현, 앞의 책, pp.201-203.

패권을 잡기위해 정한론, 아시아연대론, 탈아시아론을 만들어냈다. 정한론은 서기 200년경 신공황후가 한반도 남부를 정복하였다는 임나경영설¹⁸⁾로부터 1592년 임진왜란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토 관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하자는 것이었다. 아시아연대론은 “아시아에 침략하는 유럽문화권의 백인종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황인종이 단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혼란에 빠져 있으므로 일본이 앞장서서 먼저 조선을 복속시키거나 합병하고 중국을 개명시켜서 이에 동참시키도록 하여 일본이 아시아 황인종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탈아시아론은 일본은 제외한 각 지역의 황인종이 너무나 후진상태이거나 야만과 혼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만 낭비되므로 황인종을 개명시켜 일본이 맹주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이 빨리 서양화되어서 아시아 침략에 유럽의 백인종과 함께 참여해야 하며 그 첫 단계로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¹⁹⁾

탈아시아론은 1868년의 명치유신과 1871년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고치기 위해 떠났던 이와쿠라 사절단의 미국과 유럽 국가 방문을 통한 선진문물 학습을 통해 그 목적이 분명해졌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였던 정한론을 실행하기 위해 1875년 조선의 해안지대를 측량한다는 구실로 운양호사건을 일으켰으며 1876년에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을 자주독립국이다’라는 조항을 넣어 조선을 중국의 중화세계질서의 종속관계에서 분리시킴과 동시에 일본의 세계질서에 끌어들이려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조선을 강제로 개방시키고 나서 탈아시아론의 대외팽창정책의 일환으로 1894년에는 청일전쟁,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일으켜 모두 승리를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영토팽창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까지 대동아공영권으로 확대되었다. 대동아공영권은 일본 천황가문의 2,600주년이 되는 1940년 8월 1일 고노에 내각의 외무상이던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가 처음 썼다. 그는 “일본의 사명은 천황의 뜻을 세계에 알리고 실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가와 인종이 세계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 천황의 뜻을 받들어서 일본, 만주국, 중국을 연결하는 대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대동아공영권’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함께 번영할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그들이 거주하는 범위라는 뜻으로 시간이 지나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이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²⁰⁾ 즉 대동아공영권이 ‘원조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은 1980년대에 대외정책을 다시 바꾸면서, 군사적 안보는 탈아시아론인 친미정책으로 미국의 방위정책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인

18) 신공황후 관련 역사는 일본 학계에서도 믿으려 하지 않는 신화로 본다 : 김우현, 앞의 책, 194.

19) 김우현, 위의 책, pp.203-205.

20) 김우현, 위의 책, pp.205-207.

로는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아시아연대론인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만들고 하였기 때문이다.²¹⁾ 현재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 역시 군사·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경제·산업 전략이 그 근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한국정책 : 1965년 한일협정과 과거사문제

1) 미완의 1965년 한일협정

현재 최악의 한일관계의 가장 근원적 배경에는 1965년 한일협정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병합은 국제법상의 조약에 기초한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에 의한 위협과 강제 하에 체결된 것으로 조선 통치는 불법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 괴리는 1951년 한일회담 개시 초기부터 표면화되어 14년에 걸쳐 협상과정에서도 그 틈이 좁혀지지 않았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주효했다. 미국의 중재와 압박 하에서 일본과 한국은 당시 냉전적 상황과 각국의 경제개발계획 등의 이유로 안보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협상타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과거사 청산의 논리는 뒷전으로 밀려 났다.²³⁾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한일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로 정해졌다. 즉 언제부터 무효인가하는 문제는 의도적으로 모호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전의 조약이 무효화되었다고 해석했고, 한국정부는 조약이 체결 초기부터 무효였다는 주장이 양립하였다. 또한 동시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서도 1조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당의 생산물과 역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는 명기되지 않았으며, 2조에서 양국 간 청구권은 모두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될 뿐이어서 무엇을 위한 경제 지원이고 무엇이 해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 모호함이 현재 한일 갈등을 빚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²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유치와 냉전 체제의 전략적 고려에 의해 국내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반면, 일본의 새로운 수상 사토 에이사쿠(佐藤

21) 김우현, 앞의 책, p.208.

22) 李鍾元, “日韓對立の重層的構造と學術的課題”, 『學術の動向』, 2020, p.26.

23) 이원덕, 『한일관계 65년 체제의 성격과 한일 신시대의 과제』, 일본학회, 제127권, 2021, pp.20-21.

24) 李鍾元, 위의 논문, p.26.

榮作)는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일본의 아시아 외교의 시작’으로 보았다.²⁵⁾ 일본은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기본으로 아시아에서 주변 국가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었지만 한일관계 냉각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는 정치 보수 세력인 자민당이 장기간 집권해 왔기 때문에 과거사를 쉽게 반성하지 않았던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1993년 자민당 정권 집권 실패 후 성립된 연립 정권인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内閣) 내각과 1994년 발족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은 과거사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역사적인 김대중-오부치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도 과거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는 등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일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인식차이가 너무 커서 선린우호관계를 열어가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²⁶⁾ 일본 역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정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희망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2) 위안부 합의와 징용공 판결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실질적 원인은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의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산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더불어 2018년 10월 30일 일본 징용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기회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 합의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제기하였다. 곧이어 ‘위안부 합의 검토 Task Force’를 설치하고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일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산시켰다.

아베 정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거듭된 항의를 해왔다. 박근혜정부 때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우익, 보수 세력의 저항을 누르고 어렵게 한국과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려고 하는 것에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때부터 ‘국가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의 경우, 갈등의 촉발자 역할을 했던 것은 한국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부작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어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해당 일본기업은

25) 강근형,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정책”, 『동아시아연구논집』 제9권,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8, p.103.

26) 강근형, 위의 논문, p.104.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2018년 10월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련의 판결이 내려왔다. 더욱이 2021년 1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는 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징용재판의 결과에 대한 한국 측의 무책임에 대한 반발로 일본은 마침내 수출규제 강화라는 보복적 조치를 내렸고 한국은 이에 대한 대항조치의 하나로 GSOMIA 일시 종료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물론 이후 미국의 압력으로 GSOMIA는 원상회복 되었지만 이제 한일관계 갈등 전선은 과거사 문제에서 외교적 갈등으로 외교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안보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징용 문제는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를 심화, 확대시키는 최대 악재이다. 일본 정부나 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는커녕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재판이 3권 분립 하에서 이루어진 민사재판이므로 행정부가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징용자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한일관계는 징용문제 해결없이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양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²⁷⁾

3. 대북한정책 : 비핵화와 남북자문제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모색된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한일간의 국교정상화이후 한국일변도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중미간 데탕트 분위기속에서 동북아에서의 미국 역할 감소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독자적인 역량을 모색할 필요를 느꼈다. 더더군다나 한국이 북한과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일본은 1971년 북일의원연맹을 결성하고 1972년 북한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²⁸⁾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을 계기로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수교교섭에 의욕을 보였으나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사건, 1999년 일본인 납치의혹사건 등이 터지면서 난황을 거듭하였다. 2007년 북일 간 수교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측에 과거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배상은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중단,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웠다.

일본은 보통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과 동일시되어 왔다. 북핵에 대한

27) 이원덕,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JPI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9, p.2-5.

28) 홍성후,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0집 1호, 2007, pp.124-125.

일본의 입장은 핵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문제를 병행해서 해결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를 해왔고, 이를 6자회담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이전의 절대 불용, 핵개발계획의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북한의 핵 폐기 및 남북 일본인과 미사일 문제 해결 시 일본은 경제지원과 국교정상화 협상의 재개 의사를 밝혔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북일 국교정상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북핵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북한 핵개발카드는 일본 우익 입장을 강화시켰고 일본의 군사화를 가속시키게 된 추동력이 되어 왔다. 일본은 자연스럽게 북핵을 발미로 무력공격사태대처법,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설치법이라는 유사법제를 정비하기에 이른다.²⁹⁾ 일본의 유사법제에 대한 남북한 입장은 공통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야기 시켜 군사대국화를 조장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법제의 주적대상에 대해서는 남한은 일본의 자위적 성격으로, 북한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시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일본에게 있어 남북자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최근에는 비핵화문제와 납치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핵미사일 문제는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납치 문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아래 일본 주도로 해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³⁰⁾

IV.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분석

1. 지정학적 분석 : 환태평양연대구상 및 인도태평양전략

역사적으로 일본은 문화적 결핍을 백제를 통한 아시아 대륙의 문화수입에 의존하면서 충족시켰다. 신라통일 후 한반도에서의 문화수입 근거지를 잃게 되자 한반도보다 우월한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중국 숭배와 중국 문화 모방사대가 시작되었다.³¹⁾ 그러나 일본은 중국중심세계관을 일본중심세계관으로 전환시키는데 천착하여왔고, 앞서 살펴봤듯이 이를 지정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아시아 지배 전략을 ‘대아시아제국’,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으로 만들어

29) 홍성후, 앞의 논문, pp.127-136.

30) 李奇泰, “文在寅政權の「韓半島の平和プロセス」と日朝関係”, 『法學研究 : 法律・政治・社会』, Vol.94, No.2, 2021, p.287.

31) 김우현, 앞의 책, p.209.

일본 특유의 지정학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창출하고 대륙진출을 하는 해외전략을 구사하였다. 태평양전쟁 패전에 의한 대동아공영권 실패 후 대륙진출에의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지정학적 숙명인 해양국가로의 길을 걸어야한다는 것을 일본은 깨닫게 된 것이다.³²⁾ 자원이 부족한 일본 현실에 있어 어쩌면 바다로든 대륙이든 진출하여 자원조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당연할지 모르겠다. 패전 후 일본은 한국전쟁을 기회삼아 기사회생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고 대내외적인 힘이 생겼을 때부터 다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구상을 하게 된다.

유럽의 유럽경제공동체(EEC)을 모델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경제공동체 격인 ‘태평양자유무역지대(PAFTA: Pacific Free Trade Area)’를 1965년 일본 고지마 교수가 제안하였다. PAFTA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사이에 국제분업을 합의하고 무역자유화를 이루며, 이 지역의 후진국들과는 준회원국협정을 맺어 선진국과 후진국의 자본, 기술, 자원의 교류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자 고지마는 1968년 다시 ‘태평양무역원조기구(OPTAD: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를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에 따라 호주와 미국의 교수들이 참여하여 1979년에 태평양무역원조기구를 정식으로 제안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다양성 등의 문제로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다.³³⁾

이에 굴하지 않고 1979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수상이 수상자문기관 환태평양연구그룹(Pacific Basin Cooperation Study Group)을 만들어 1980년에 공식적으로 ‘환태평양연대구상(PBC: Pacific Basin Cooperation Concept)을 발표하였다. 핵심회원국으로는 이 지역 선진 5개국(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아세안 5개 국가(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회원국 명단에 한국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아를 포함하여 군사·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려 하였으나, 일본은 환태평양연대에서 경제적·문화적인 교류를 강조하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아세안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³⁴⁾

일본은 한국과는 별도로 한일자유무역지대를 제안함에 따라 한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러한 일본의 구상은 과거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관인 내선일체 역사관에 비유할 수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연대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일본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실현하여 자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한국과는 별도로 ‘일본과의 통합체’를 만들어서 일본 국력

32) 구라마에 모리미찌 지음, 최현 옮김, 앞의 책, p.260.

33) 김우현, 앞의 책, p.266.

34) 김우현, 위의 책, p.267-268.

으로써 핵을 이루려는 것이다. 즉 한일자유무역지대는 환태평양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인 것이다.³⁵⁾ 일본의 내선일체 역사관에 기반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 가지 더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 바로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다. 경제적 목적에 의한 동남아시아에의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사용했던 전략이다. 동남아는 당시에 일본에 전략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었던 역사가 있다. 일본은 전후 배상처리하고부터는 환태평양연대나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관리하여 왔다. 이러한 목적에 방점을 찍은 것이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수상의 미야자와 독트린과 1997년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수상이 발표한 오부치 독트린이었다. 이는 일본의 군사안보와 경제가 같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다는 의미였으며 일본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제2대동아공영권’으로 불리기도 하였다.³⁶⁾

이러한 일본의 환태평양연대구상은 현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맞닿아있다. 미국의 21세기 세계지배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은 원래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06년부터 당시 일본의 대외전략으로 구상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전략’의 추진에 합의하고, ‘자유롭고 열린(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함으로써³⁷⁾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이 일본의 대외전략을 인정하고 차용한 모양새가 되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 역시 중국의 팽창주의 대외정책과 일대일로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성장이 빠른 아시아’와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의 연계,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과 인도양의 연계 등으로 세계성장의 중심이 변화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기반으로 구상되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보다 넓은 전략 공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중 전략경쟁 구도라는 국제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연결성’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³⁸⁾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동맹에 대해서는 동북아에서의 쿼드협약체 3개국(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ASEAN과 APEC을 간단히 언급한 수준이었다면, 현 바이든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는 기존의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승계함과 동시에 ASEAN에 대한 정책이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인도의

35) 김우현, 앞의 책, p.270.

36) 김우현, 위의 책, pp.281-283.

37) 조양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 외교』,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p.1.

38) 이기태, “일본의 지역전략:국제협조 지향의 ‘열린 지경학’”, 『한국일본학회지』, 제129권, 2021, pp.297-298.

급부상과 지역 리더십을 지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일본의 동남아 시장 중시하는 일본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보다 더 유사해진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은 대중국 견제라는 틀 안에서 거의 동일한 외교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맹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공식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전략 문서에는 한국은 모든 동맹협의체에 빠져있다. 거의 대부분 북한 위협을 대응할 공동 파트너 내지는 한미일 삼각 채널 안에서의 존재 정도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명 코리아 패싱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에게 다양한 협의체 가입을 권하고 있고 윤석열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코리아 패싱이 일상화된 일본과는 관계 정리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대통령이 6월 29일에서 30일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사화되었다.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하는 양국 정상들의 의지가 기대된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볼 차례이다. 일본이 한반도 분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까지 발견된 첫 번째 기록은 1593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듬해 6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강화사 사용재(謝用梓)에게 주어 보낸 소위 일본의 국서에서 발견된다. 당시 일본이 명(明)에 제시한 7개 강화 조건 중 네 번째 항목이 조선의 8도를 이북의 4개도와 이남의 4개도로 분할해서 남쪽을 일본이 갖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1894년 7월, 청일 전쟁 발발 직전에 나온 영국외상 킴벌리(Kimberley)의 안이다. 당시 한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있던 일본과 청나라를 중재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 안은 구체적인 경계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반도를 청일 두 나라가 분할점령하자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는 1896년 6월, 당시 외상 로마노프(Romanov)와의 회담에서다. 이때 일본외상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하여 러시아와 일본이 남북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한 것이다. 네 번째는 1903년 9월, 주일본 러시아 공사인 로오센이 일본 측에 제시한 한반도 분할 안이다. 북의 39도선을 경계로 분할하되 그 이남에는 일본의 특수이익을 누리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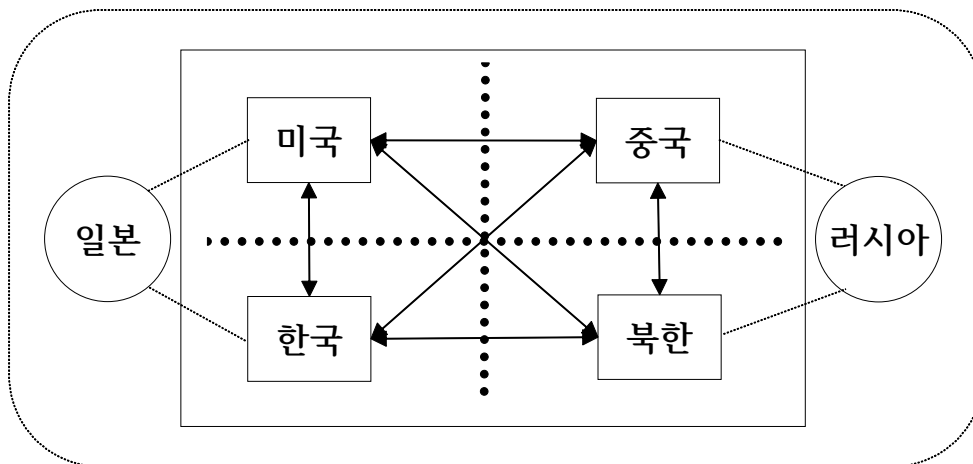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일본은 대륙진출을 위한 전쟁의 결과로, 또는 경쟁국과의 강화조건으로 한반도를 분할 또는 분할점령을 논의한 전력이 많다. 즉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진출의 발판이자 전후 처리의 도구로 인식했을 뿐이다. 물론 결국에는 한국전쟁 후 미소의 대립가운데 한반도가 분할되긴 하였으나 일본은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을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남북통일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특히 구라마에 모리미찌 교수는 만약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일본의 이익선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로서 한국을 방위하고 일본의 우호국으로서 단호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³⁹⁾ 이는 냉전기 일본의 인식으로 최소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게 하려는 현상유지(status quo) 전략이자 한반도 통일에는 소극적인 전략이다.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의 휴전선은 소련과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방파제였고 한국은 일본을 보호하는 완충지대였다. 일본에게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분단이 축복이었다. 따라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 완화와 평화 무드 조성은 일본에게 있어 위협이자 우려의 대상이다. 결국 일본은 분단되고 대립하는 한반도를 원하기 때문에 긴장완화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⁴⁰⁾

그러나 최근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에 변화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일본 내 일부 전문가 중에는 핵을 보유한 북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것보다 오히려 급격한 한반도 통일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⁴¹⁾ 즉 일본은 당연히 자국 이익의 향방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찬성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한반도 통일보다는 산적한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북한과의 남북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필자가 생각하는 북핵문제 관련국 6개국의 위치이다. 핵심 당사국인 미국, 중국, 한국, 북한 4개국은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역내의 당사국이고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역외의 관련국일 뿐이다.⁴²⁾ 일본의 머릿속에 한국이 빠져 있듯이, 한국인 머릿속에도 일본은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는 <그림 1>과 같이 단순한 역외의 참관국(observer)로 자리할 뿐이다. 한마디로 재팬 패싱(Japan Passing)이다.

<그림 1> 미국/남북 상하-좌우 교차구도



출처 : 고은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대한정치학회보』, 제30집 2호, p.93.

39) 구라메아 모리미찌 지음, 최현 옮김, 앞의 책, pp.202-206.

40) 김동기, 앞의 책, pp.302-303.

41) 李奇泰, 앞의 논문, p.294.

42) 북핵 협상 관련 6개국 관계 설정은 고은귀, 위의 논문, 참조.

2. 게임이론적 분석 : 중위투표자정리와 기대효용이론

제2장 이론 검토에서 살펴봤듯이, 일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선택 예측이나 선택 후 결과 검증에 중위투표자이론과 기대효용이론이 매우 유용하다. 한일관계의 정리를 위해 한국이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살펴보자. 먼저 한국과 일본 각국의 상호 인식과 한일관계에 대한 여론은 2021년 12월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은미박사가 발표한 “한국과 일본, 우리의 서로에게 무엇인가: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보고서⁴³⁾를 참고하고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한일관계 분석 대상은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중 강제징용 문제만으로 한정한다. 어차피 위안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어있고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종속적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와 그 행위자의 입장과 선호안을 살펴보자. 행위자는 양국정부, 양국 여론(국민), 그리고 양국 전문가로 정한다.

1. 한국 정부 :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⁴⁴⁾
2. 한국 전문가 :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제소하자는 의견과 일본의 사죄+한국의 배상포기+피해자 국내구제를 선언하는 일련의 방법을 제안하거나⁴⁵⁾,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피하기 위한 타협안 모색과 현금화를 대비한 대응책 준비를 제안하였다.⁴⁶⁾
3. 한국 여론 : 2019년에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과 현금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2021년에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현금화가 여전히 1위이지만 제3자를 포함한 중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국제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두 번째로 많았다.⁴⁷⁾

43) 최은미,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아산리포트』, 아산정책연구원, 2021.

44) 외교부 보도자료, “강제징용 판결문제 우리 정부 입장”, 2019. 6. 19. 배포

45) 이원덕, 앞의 논문, pp.12-13.

46) 조양현, “일본 대외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참조.

4. 일본 정부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⁴⁸⁾ 현재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선호안 1번의 입장을 일본 정부가 거부한 뒤 별도의 대응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5. 일본 전문가 : 이번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기될 유사 사건의 비슷한 소송이나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입법 조치로 항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가능하면 현금화 조치를 미룸으로써 항구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⁴⁹⁾
6. 일본 여론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일본 여론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1위를 하였으나, 2위의 답변은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2021년 한국 사업부의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배치되므로 일본기업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⁵⁰⁾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여 모두 해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으므로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일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나 현금화 조치 유보와 같은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각 국의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따라야한다는 한국 국민들의 입장과 잘 모르겠지만 가급적 한국 사업부 판결에 일본 기업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일본 국민들의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우세하여 양국 국민의 인식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행위자별 입장 선호에 등급을 매기면 아래와 같다. 등급에 따른 점수는 필자가 임의의 수치로 정하였다. 등급 ‘0’ 에 가까울수록 일본 입장에 가깝고, 등급 ‘100’ 에 가까울수록 한국 입장에 가깝다.

47) 최은미, 앞의 논문, p.72.

48) “日기시다, 강제징용 기존 입장 고수…韓에 해결책 요구”, 2021년 10월 13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560&cID=10301&pID=10300NEWSIS(검색일: 2022. 6. 9.)

49)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도쿄대학교),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2021.2.25.) 발표자료 참조.

50) 최은미, 위의 논문, p.72.

- 0 = 한국 정부는 일본에 사죄도 받지 않고 한국 내에서 피해자 보상을 해결한다
 30 =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일본 기업은 따를 필요가 없다
 55 =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여 그 판결에 따른다
 85 = 현금화를 유보하고 다른 타협안을 모색할 때 까지 양국이 협조한다
 90 = 양국 기업과 민간의 기부로 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100 =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과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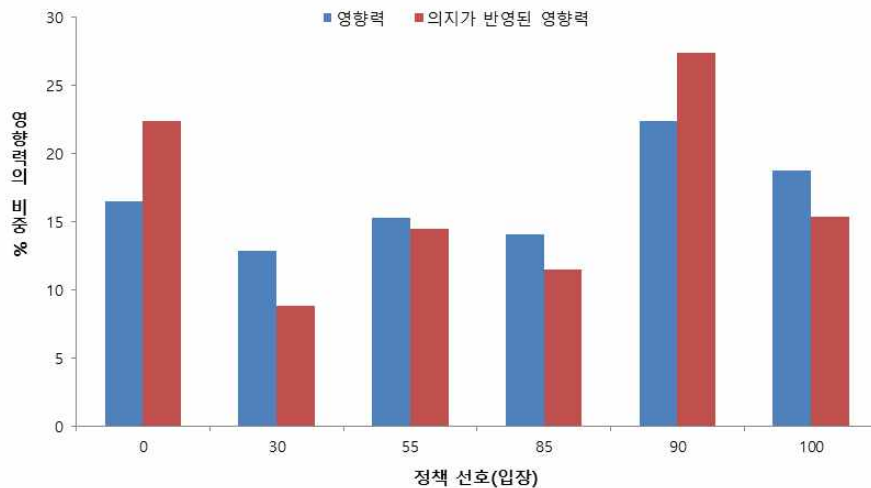
각 행위자들은 위에 제시된 선호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각 행위자에 영향력과 이에 해당하는 현저성 점수도 표시해야한다. 영향력은 비록 임의의 가정으로 정한다고는 하더라도, 현저성의 경우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역시 입장에 기초한 의지로 표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행위자의 영향력, 입장, 현저성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데이터 가정(한국/일본)

행위자	영향력 (I)	입장 (P)	현저성 (S)	영향력 비중(%)	의지가 반영된 영향력 비중(%) (I×S)
한국 정부	95	90	90	22.4	27.4
한국 전문가	65	55	70	15.3	14.5
한국 여론	80	100	60	18.8	15.4
일본 정부	70	0	100	16.5	22.4
일본 전문가	60	85	60	14.1	11.5
일본 여론	55	30	50	12.9	8.8
합계	425		430	100	100

이렇게 구축된 임의의 가정 데이터 기반으로 절충된 기대정책을 예측하여 보자, 표에서 영향력의 값을 모두 더하면 425이다. 이 값에서 각 입장의 영향력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향력의 총합에서 각 영향력이 차지하는 백분율과 같다. 이 백분율 값을 우선 구하고 마찬가지로 현저성이 반영된 영향력에도 이론에 나온 공식대로 영향력과 현저성 값을 곱하고 그 합에 대한 백분율로 비중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그림 2>와 같은 그래프가 도출된다.

〈그림 2〉 각 행위자의 영향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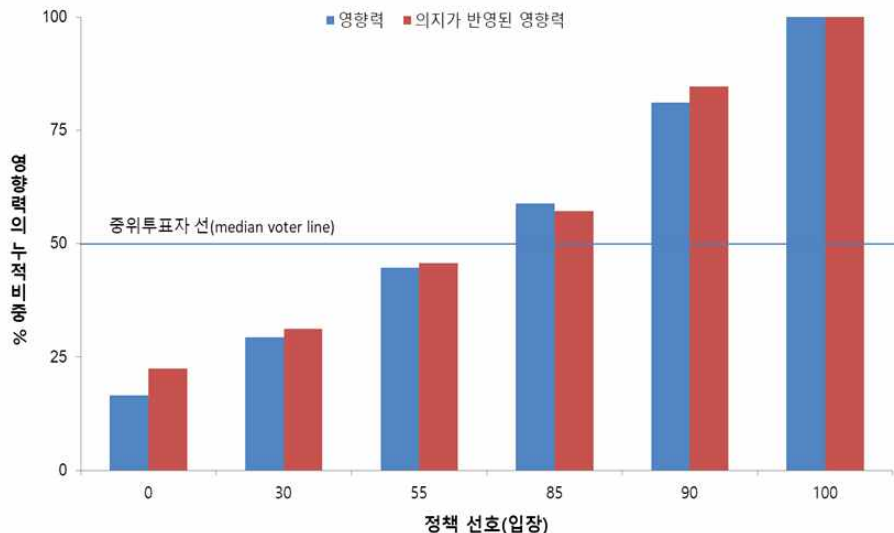
각 등급 구간에 있는 두 개의 막대 중 왼쪽 막대는 각 입장을 선호하는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오른쪽 막대는 실제로 그것을 행사할 의지가 반영된 영향력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각 정책 선호하는 행위자들의 영향력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단순 영향력과 의지가 반영된 영향력의 차이도 볼 수 있다. 앞서 밝혀듯이, 현저성이 100인 행위자는 자신의 선호안을 위해 자기의 힘을 백퍼센트 사용할 것이라는 각오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대다수의 행위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현저상 값에 의해 ‘할인’ 또는 ‘감소’ 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그림 2〉의 그래프를 누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이 도출된다. 정책 선호 등급에서 분기점이 되는 등급은 저 중위투표자 선(median voter line)이 최초로 만나는 막대가 속해 있는 등급이라는 의미이다. 즉, 85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 보다 강경한 입장을 선호하는 행위자의 영향력 비중과, 그 보다 온건한 입장을 선호하는 행위자의 영향력 비중의 합이 각각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가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이 지점이 행위자들 사이의 입장이 절충을 이루는 곳이고, 곧 중위투표자 선이 되는 것이다. 현저성이 반영된 누적 그래프는 85지점에서 중위투표자선을 만났다.

정책 선호안 85는 ‘현금화를 유보하고 다른 타협안을 모색할 때 까지 양국이 협조한다’라는 정책안으로서, 평소 여러 한일 전문가들이 정책 세미나에서 많이 주장하는 안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55 정책선호안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여 그 판결에 따른다’가 중위투표자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게임이론 모델에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즉 한일 양국 정부가 향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안이 결국 일본 기업으로부터의 현금화를 우선 유보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조금 더 합리적인 다른 타협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3〉 한국/일본 기대정책



그러나 이러한 안이 선택되기 위해서 국내에서 먼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과정을 통해 국민과 시민단체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정부의 설득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최근 조사에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에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고 보도되었으며⁵¹⁾, 일본 역시 한류 영향으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오기 위한 비자신청 건수가 갑자기 늘었다는 소식 등을 고려해볼 때 한일 정부의 협상과 협의가 난관은 예상되나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점증하는 북중러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한미일 삼각 협력 채널 강화 중재에 일본은 냉정하게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지지가 있어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정부도 중위적 위치의 정책을 선택해야하는 과정에서 자국 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하겠지만, 양국 모두 이 정책안이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51) “한일관계, 윤석열정부 출범으로 개선”... 기대 2배씩 커졌다”, 『한국일보』, 2022년 6월 9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714550005988>(검색일: 2022.6.10.)

V. 결론 : 합의 및 제언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의 한반도 인식에 따른 대한반도 정책을 지정학적으로 분석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악화된 한일 관계 정리를 위한 정책적 선택을 게임이론(중위투표자정리 및 기대효용이론)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정학적으로는, 일본은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아시아제국’, 중일 전쟁 시의 ‘동아신질서(동아협동체론)’, 제2차 세계대전 시의 ‘대동아공영권’, 60년대~90년대까지의 ‘환태평양연대구상’, 그리고 아베 총리 이후의 ‘인도태평양전략’ 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일본 특유의 지정학적 아시아 지배전략을 구상하고 끊임없이 침략과 도전을 반복하여 왔다. 섬나라 자체 태생적인 한계로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같은 해양국가인 영국과 다르게 대륙으로 진출하였으나 태평양 전쟁 실패 후 태평양으로 다시 돌아와 현재는 중국 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미국과 함께 규범 기반의 가치(rule-based value)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을 규합하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 한반도는 대륙진출의 발판이자 과거 소련의 남하를 방어할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일본 이익선일 뿐이고 현재도 그들의 인태전략에는 한국이 없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일본은 한국과 북한에 대해 두 코리아(two korea)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과는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가장 핵심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두 문제를 분리하여 비핵화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인 납북문제가 일본의 가장 큰 현안이 되었다. 일본은 향후 기회 있을 때마다 납치자 문제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 한미의 대북 협상이 개최될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최소한 현상유지와 같은 소극적 정책을 지지하였으나 최근 일본 내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일본 국익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향방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의 북핵 문제 해결 테이블에서 역외의 참관국일 뿐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 나름의 재팬 패싱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책관련해서는 위안부와 징용공문제가 악화일로의 원인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개인청구권 문제가 양국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모호성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서 관련하여 양국 관계의 핵심 어젠다(agenda)가 되었다. 윤석열 새정부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 미국의 북핵

대응 모델인 한미일 삼각 협력 채널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계 개선이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징용 판결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양국의 정책 선택 기대를 게임이론(중위투표자정리 및 기대효용이론)으로 분석하여 기대예측 정책 선호안을 도출하여보았다. 결과는 한일 전문가들이 그 동안 수없이 많이 제안하여 온 ‘현금화를 유보하고 다른 타협안을 모색할 때 까지 양국이 협조한다’ 였다. 사실 이 협상안은 한일 양국 정부도 한일 양국 국민 모두의 선택지가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정책안이기에 때문에 만약 한일 양국이 이 정책안을 선택한다면 각국은 국내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할 합리적 절차를 거친 후 정책을 실행해야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나, 국제 정세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국민들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윤석열 새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려한다.

1.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와 미중전략경쟁 시대에 한미일 협력 체제에 협조는 하나, 일본의 해양국가로서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의 야심을 면밀히 살펴 코리아 패싱을 고려하여 각 동맹협업체 가입에 신중을 기한다.
2.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국민설득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일본 정부와의 타협안을 마련한다.(현금화 유보 포함)
3. 향후 한미북 3국이 북핵 협상을 진행할 시 지나친 일본의 참여와 정책 간섭을 경계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외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한국정부의 대일본 정책이 집권한 정권 이념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므로, 향후 이러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 때 과거사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5. 위안부 및 징용 판결과 같은 과거사 문제 관련하여, 앞으로 일본이 국가의 약속 운운하지 않게, 또한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스스로 하지 않는 한 한국이 일본 사과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모든 과거사 관련 문제는 한국정부에서 지원 처리한다. 차라리 한국이 전향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않고 과거는 역사 속으로 묻어두고 미래만을 보고 관계를 발전시킨다’ 라는 안도 고려하기를 권한다. 끝.

참고문헌

- 강근형,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정책”, 『동아시아연구논집』 제9권,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8
- 이기태, “일본의 지역전략:국제협조 지향의 ‘열린 지경학’”, 『한국일본학회지』, 제129권, 2021
- 이원덕, “대결로 치닫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JPI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9
- 이원덕, 『한일관계 65년 체제의 성격과 한일 신시대의 과제』, 일본학회, 제127권, 2021
- 홍성후,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국제정치연구』, 제10집 1호, 2007
- 李鍾元, “日韓対立の重層的構造と学術的課題”, 『学術の動向』, 2020
- 李奇泰, “文在寅政権の「韓半島の平和プロセス」と日朝関係”, 『法學研究 : 法律・政治・社会』, Vol.94, No.2, 2021
- 고은귀, “쿠바 미사일 위기 시 행위자 선택 게임:3가지수준(three-level 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동기, 『지정학의 힘』 (과주: 아카넷, 2020)
- 김영세, 『게임이론-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서울: (주)박영사, 2019)
- 김우현, 『세계정치질서』 (과주: 도서출판 한울, 2001)
- 조양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구상과 일본 외교』,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 구라마에 모리미찌 지음, 최현 옮김, 『새로운 악의 논리』, (서울: 범우사, 1980)
- Bruce Bueno De Mesquita 저, 김병화 옮김, 『프리딕셔니어 미래를 계산하다』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도쿄대학교),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2021.2.25.)
- 외교부 보도자료, “강제징용 판결문제 우리 정부 입장”, 2019. 6. 19. 배포
- 조양현, “일본 대외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자료 “尹정책협의단 방일...日 “국가 간 약속 준수가 기본”“, 『조선일보』, 2022년 4월 18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2/04/18/KXP5YAHBBZDWLIZA2A6NRMGBA4/>(검색일: 2022.5.30.)
- “日기시다, 강제징용 기존 입장 고수...“韓에 해결책 요구”, 『뉴시스』, 2021년 10월 13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560&cID=10301&pID=10300NEWSIS(검색일: 2022. 6. 9.)
- “한일관계, 윤석열정부 출범으로 개선“... 기대 2배씩 커졌다”, 『한국일보』, 2022년 6월 9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714550005988>(검색일: 2022.6.10.)